김건희의 강 너머 대장동의 늪

태평로

배 성 규
정치 에디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 리스크 탈출이었다. 대장동을 필두로 선거법·대북 송금 등 10여 가지 의혹이 따라다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변호사들조차 대책을 내놓지 못할 때 늘 돌파구를 제시한 건 이 대통령이었다. 한 측근은 "밤잠도 자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응 방안을 착안해 냈다"고 했다.

요즘 여권은 대통령에게서 '피고인' 석 자를 떼내기 위해 다시 총력전에 들어갔다. 재판에서 공소 취소나 면소(免訴),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위헌 논란을 부르는 무리수까지 남발하고 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국정 안정법'을 시작으로 사건 담당 판·검사들을 겨냥해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고 했다. 허위 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면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쳤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웠고,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에 나섰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도 추진한다고 했다.

대장동 1심 판결 후 강도는 더 세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환수당하지 않도록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검사들이 법정에서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과속에 제동을 걸던 대통령이 대선 때처럼 전면에 나선 것이다. 임기 초반 국정 에너지를 대장동 벗어나기에 쏟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재임 끝까지 '김건희의 강'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인사·국정 개입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지만 모두 묵살했다. 참모들이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건

대통령 재판 무마에 온갖 무리수
'金 지키기' 올인한 尹 닮아가나
대통령의 최고 방패는 국정 성과
실패한 文 정책까지 옹호해서야

의하면 화부터 냈다. 국민 여론엔 귀를 닫고 국정 동력을 '김건희 지키기'에 쏟아부었다. 폭주의 종착점은 비상 계엄과 탄핵이었다.

지금 이 대통령 재판은 모두 중단돼 있다. 재임 중 사법 리스크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그런 기회를 줬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장동 재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편파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퇴임 후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면 된다. 논란을 일으킬 정치적 액션은 피하고, 대장동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그런데 여권은 걸핏하면 대장동 늪을 메우겠다고 진창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3년 내내 김건희의 강에서 허우적대다 끝난 윤 정부를 또렷이 보고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인가. 여권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구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재판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실패까지 옹호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통계와 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대북 몰이에 면죄부를 주려고 감사 뒤집기에 나섰다. 정치 보복은 없다더니 특검에 이어 전 부처 공무원을 조사하는 TF를 만들었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다르지 않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기업 옥죄기 입법, 현실성 없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 '쿠주성'(소비쿠폰 주도 성장)도 빼닮았다.

국민이 각종 의혹에도 이 대통령을 뽑은 것은 일 잘하는 대통령, 먹사니즘으로 잘살게 해주는 대통령을 원했기 때문이다. 대장동·선거법 등 재판은 퇴임 후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 혹여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은 과거 허물보다 재임 중 치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최고의 방패는 국정 성과다. 대장동 재판 집착증은 역효과를 부른다. 무리수를 쓴다고 늪이 메워지진 않는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09]

인류애 담은 최초의 '굿즈'

웨지우드사(社), 노예제 반대 메달리온, 1787년경, 재스퍼웨어와 금속, 3.2×2.7㎝,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흑인 남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 간절히 묻는다. "나는 인간도 형제도 아니란 말입니까?" 노예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메달리온은 지금도 백화점 명품관에 있는 영국 도자기 회사 웨지우드 제품이다. 1787년 이 메달리온이 출시되자 귀부인들은 앞다퉈 머리핀·모자 장식·팔찌로 착용했고, 남성들은 담뱃갑에 붙여 두고 틈날 때마다 내보였다. 미국과 프랑스까지 널리 퍼진 이 메달리온은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유행했다.

말과 글보다 강력한 디자인의 힘을 보여준, 이 최초의 '한정판 굿즈'를 창시한 이는 바로 조사이아 웨지우드(Josiah Wedgwood·1730~1795). 그는 왕실의 장인(匠人)이면서 윤리적 자본가였고, 급진적 지식인이자 혁신적 사업가였고, 유행을 선도하는 디자이너이자 사회운동가였다. 이렇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을 가능케 한 건 사실 불행이었다. 가난한 시골 도공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물레를 밟았지만, 천연두 후유증으로 다리 한쪽을 잃어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때부터 그는 디자인과 신소재 개발, 공정 최적화와 마케팅에 주력했고 마침내 위대한 산업가가 됐지만, 절망과 소외의 기억을 잊지는 않았다. 노예제를 인류의 죄악으로 여겼던 그는 이 메달리온 수천 개를 자비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웨지우드의 외손자가 바로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다. 진화론의 뒤에는 편견 없는 인류애, 자유로운 사고와 막대한 자본이 있었던 셈이다. 12월 2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노예제 폐지의 날'이다. 우리에게는 인류애·자유·자본이 있으나 인신매매와 불법 노동 착취 같은 현대판 노예제는 여전히 횡행한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說

개인정보 유출 年 6300만 건, '국가 재난'이다

지난 4월 SK텔레콤(2700만), 9월 롯데카드(300만)에 이어 쿠팡 사태(3370만)로 올해만 6300만 건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법원 등 정부 기관 세 곳과 디올·티파니 등 명품 업체에서 일어난 유출 등은 일일이 세기조차 힘들다. 국민 숫자보다 많은 정보가 털려, 한 사람이 많게는 두세 번씩 사이버 공간에서 벌거벗겨졌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털린 정보들이 해커의 손에서 결합될 때다. A사이트의 비밀번호와 B사이트의 주소, C사이트의 카드 번호가 합쳐지면 보이스 피싱을 넘는 금융 사고도 우려된다. 초고속 진화 중인 기술적 위협도 눈앞에 닥쳤다. 중국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로 현행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을 입증했다는 소식은 섬뜩하다. 해커들이 지금 훔친 암호화 데이터를 쟁여 뒀다 나중에 잠금을 해제해 공격하는 일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정보 유출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시한폭탄이 된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으로 불러야 마땅할 사태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응은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식의 각자도생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유출을 태풍이나 지진 같은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국민 3300만 명의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가는데도 정부가 침묵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동통신 3사·쿠팡 등은 법적으로 민간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론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일본은 라인야후 사태 당시 플랫폼을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 자산'으로 간주해 기업의 경영까지 문제 삼았다. 그런 위기 의식을 참조해야 한다.

동시에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대응 컨트롤타워'의 가동도 필요하다. 지금 기업들에겐 보안 강화 비용보다 뚫렸을 경우 과징금이 더 싸다고 한다.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보안 투자를 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한번 뚫리면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쿠팡은 물론 상당수 대기업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기업내 대관(對官) 담당으로 대거 영입 중이다. '정치 만능'인 나라에서 이런 유착은 관료와 정치인을 방패막이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흘러가 결국 대규모 정보 유출 같은 사고를 반복시킬 수 있다. 보안에 대한 투자 대신 정치 로비로 막겠다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 기관이 해킹 당하는 실태도 심각할 것이다. '데이터 국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

특검의 오세훈 시장 기소, 선거운동 아닌가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기소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그 비용 3300만원은 아는 사업가가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기범죄자인 명태균의 거짓말만 있을 뿐, 증거도 실체도 없는 가운데 결론을 정해 놓고 기소한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에 따른 정치 기소"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사건 본질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기 때문에,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오 시장에게 "당장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라"며 공세에 나섰다.

누구든 불법 행위를 했다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도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오 시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선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시작된 수사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인데도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기소가 이뤄졌다. 지방선거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 때 쟁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오 시장을 겨냥해 수사와 진상조사 같은 공세를 이어왔다. 민주당 내란특위는 서울시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했다며 행안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계엄 당일 밤에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오 시장이 계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무총리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상가 재개발, 한강버스,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 현장을 찾아 이를 비판했다. 마치 당과 정부가 오 시장 스토킹을 하는 듯했다. 검찰과 행안부에 이어 이제 특검까지 오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특검들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원천 배제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그런 민주당 특검이 민주당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 하고 당·정은 반대로, 몇 번째인가

국회 기획재정위가 상속세 인적 공제 한도를 높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안을 장기 과제로 보류하기로 했다. 인적 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이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도 했다.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자"는 것이다. '잔인하다'며 '18억원'이란 구체적 액수까지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개편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대선 때는 "(개편을) 빨리 하자"고도 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28년째 묶여 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말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오픈 AI 최고경영자를 만나 "금산 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부총리도 호응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 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를 주무 부서장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선 "보유세 인상에 공감"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란 말이 나온다. 대통령은 기업 총수를 만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을 강행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책 지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임기 초인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 이행 여부도 챙기지 않나. 대통령은 국민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당·정은 이에 개의치 않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좌파가 부귀영화 누리는 세상 되니

결정적 순간 자기 당에 칼 꽂는 자들 거듭 나온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 봐야하나
사회 곳곳 좌파 거대 이권 카르텔 뿌리 내려
우파 정권, 오히려 우파 홀대

◀ 좌파하면 배 곯는다는 것은 옛말이다. 미 문화원을 점령한 자가 국무총리고, 미대사관저를 테러한 자가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는 세상이다. ⓒ챗 Gpt

배부른 좌파 vs 배고픈 우파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다. 87년 개헌 때 사회민주주의 요소가 추가되긴 했지만, 큰 뼈대는 달라지지 않았다. 우파 가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좌파 가치가 일부 가미된 것이 헌법의 근본정신이다.

요즘 헌법 가치에 맞는 우파로 살아가는 것은 ***《간난신고(艱難辛苦)의 자갈길》***이다. 반면 강성 좌파나 패션 좌파 흉내라도 내면 ***《부귀영달(富貴榮達)의 꽃밭길》***을 걷는다. ***《좌파는 배가 고프고 우파는 배가 부르다》***는 말이 있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재명 정권의 국무총리 ***김민석***과 집권여당 대표 ***정청래***는 극좌 반미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두 사람 외에도, 현 정권 각계 핵심 요직 상당수가 80~90년대 극좌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추구 《**진짜 민주화 운동**》 아니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추종이 《**민주화 운동**》일 수 없다. 사기 치지 말고 솔직해지자.

참여연대나 ***민언련*** 같은 좌파 단체 출신들도 잘 나간다.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는 좌파 언론단체 민언련 출신이다. 차관급 방송위 부위원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지역구 의원 및 과방위원장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 전현직 임원의 36.1% 150명이 청와대 등 313개 요직에 진출했다. 이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SKY(서울-고려-연세대) 위에 한국 최고의 대학, 참여연대가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온통 득세·출세하는 좌파 카르텔

공무원들의 좌경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 숙청작업이 진행되면,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것이다. 공기업 사장-감사는 물론 비상임이사(사외이사)들도 대거 좌파 인사로 채워진다.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 과거 ***박원순***과 ***조희연***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된 뒤 요직에 운동권 출신이 낙하산을 타고 대거 내려갔다.

사법부 역시 좌파 성향 법관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나 비슷한 성향의 판사들이 《깜》이 되지 않더라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보직에 잇달아 올랐다. 좌파 활동 경력은 고난의 길은커녕 초고속 출세와 막대한 치부로 이어지는 일종의 ***《훈장》***이 됐다. 좌파들 사이에 ***《거대한 이권(利權)의 사슬》***이 구축됐다. 머리 회전이 빠른 젊은이들이라면, 조기 신분 상승과 돈벌이를 위해 좌파에 뛰어들만 하겠다.

우파정권의 한심한 인사정책

우파가 직면한 현실은 어떨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심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자유우파 활동은 희생과 헌신으로만 점철된다. 선명한 정통우파일수록 개인적으로는 일제 시절 독립군과 비교될 정도의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 같은 비(非) 좌파 정권 때도 우파 인사의 발탁은 소수에 그쳤다. 어쩌다 우파 인사를 기용하려다가도 좌익 야당-언론매체가 난리를 치면 ***《없던 일》***로 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고 ***박형준***이 부산시장 된 뒤 우파 인사들을 과연 몇 명이나 발탁했을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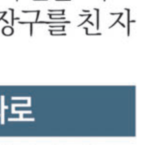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공천도 한심하다. ***한동훈***이 공천권을 장악한 지난 2024년 4.10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 높은 영남과 서울 강남권에 우파 운동가 공천은 없었다. 국힘 지지세가 강하다는 울산 남구갑에 *결국 민주당으로 옮겨간 좌익 출신 배신자* ***김상욱***을 전략공천했다. 우파 활동가 **원영섭** 변호사가 부산진구갑에 공천 신청하자, 컷오프 시키고 뜬금없이 한국교총 회장 출신 ***정성국***을 공천, 지금까지도 잡음이 일고 있다. 컷오프나 후보 교체로 피눈물 흘린 **민경욱 도태우 장예찬 김소연** 등의 아픔도 있다.

국힘 의원, 당협위원장,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기회주의가 몸에 밴 《뺀질이》***들이나, ***좌파에 더 기울어진 사람들***이 상당수다. 좌파 특혜에 대한 문제제기는 못하면서, ***《가뭄에 콩 나듯》*** 발탁되는 우파운동가들에게 좌익세력이 극우니 친일이니 하는 낙인을 찍으며 매도하면, 받아치지 못하고 쩔쩔매거나 맞장구를 친 자들도 적지 않았다.

고생하는 사람 따로, 이익 챙기는 사람 따로

민주당과 그 홍위병들은 철 지난 극좌 포퓰리즘과 독선-막말-욕설-욕심 덩어리다. 반대로 국힘의 비극은 이념-철학도 없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데 기여한 역할도 적은 ***《웰빙 기회주의자들 몫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저질 좌익세력과 싸우며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익 챙기는 사람 따로 있는 썩어빠진 체질을 확 바꾸지 못한다면, 국힘의 미래는 없다. 고생에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질 좌익세력과의 투쟁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인지, 국힘인지 애매한 언행을 되풀이하는 자들.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당에 칼을 꽂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정당 체질.*** 이런 꼬락서니를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1월 30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85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